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

김 준 섭 (국방대학교)

| 요약 |

일본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입장과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핵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인납치문제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수동적,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수동적 태도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여,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진 여론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변경시켜왔다는 점이다.

향후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일본의 대응은 달라질 것인데, 우선 2.13합의가 이행되어 북핵의 불능화가 실현되었을 경우 일본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은 2.13합의에 있어서도 일본인납치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제조치 역시 납치문제를 이유로 해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아베 수상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베 정권이 계속된다면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한 정도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이상 일본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북한이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이행하는 상황, 즉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계속해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2002년 당시와는 반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일본외교의 기본축인 미일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핵 불능화 조치조차도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핵보유를 향해서 나아갈 경우, 일본의 대처는 어떠한 것인가. 이 경우 일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MD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길, 둘째, 북한의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갖추는 길, 셋째, 일본도 핵무장을 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는 길이 그것들이다. 비록 이 세 번째 길이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이 길을 걷지 않으리라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를 한반도의 평화와 결부지어 생각해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일수교가 이루어져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의해 북한이 자생적인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 일본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입장과 정책

일본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핵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인납치문제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문제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오직 발생 한 사태에 대해 반응을 하는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보수정치인들은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전보장 정책을 변경시키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정비와 같은 일들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렇게 본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 이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일본의 북핵 해결과정에서의 입장과 정책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일본인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현재 일본정부는 일본인납치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한 인상을 세계 각국에 주고 있다. 어떠한 국제회의 혹은 양국간, 다국간 정상 회담에서도 일본은 반드시 이 일본인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공식적인 발표문 등에 이 문제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핵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의 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디 북핵문제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이 문제를 일본이 계속 6자회담의 장에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다른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북일 양국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6자회담의 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외교의 입지를 좁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스스로의 정책을 바꾸고 있지 않다. 2003년 고이즈미 수상의 2차 평양방문을 주도했던 야마사키 타쿠(山崎拓)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해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모두 이해당사자들이다.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납치문제를 우선하자고 말해도 “납치문제는 양국간 문제가 아닌가요”라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된다. 양국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다른 나라들은 핵문제로 머리가 가득차 있는 것이다. 납치를 우선시켜 핵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납치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시계열적으로는 핵·미사일 → 납치 → 경제협력 → 국교정상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핵과 납치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핵문제 해결을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¹⁾.

이 야마사키와 같은 입장에서,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역시 납치 문제에 대해 “최초에는 모두 납치피해자에 동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

1) 山崎拓, “米朝妥協, 日本はバスに乗り遅れる,” 『中央公論』, 2007년 3월호, p. 140.

는 6자협회의 어떤 회의에서도 매번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청에 보내는 전보에도, 일본의 수석대표의 발언취지는 ‘전번과 같다. 납치문제에 집중, 새로운 것은 전혀 없음’이라고만 보낸다”는 한국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며, 납치문제는 핵문제와 연동시키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납치문제를 운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외교의 차원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

그런데 여전히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논자는 일본 내에서는 소수파이며, 일본정부 역시 이와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권고가 왜 현재의 일본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 일본이 납치문제에 관련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일종의 폐쇄회로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 폐쇄회로의 구조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 당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사건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다만 고이즈미 방북의 다음날인 18일 실시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한 측의 대응에 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가 76%, “납득할 수 있다”가 15%로 북한에 대하여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교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58%, 반대가 28%로서 비교적 침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³⁾.

그런데 2002년 9월 17일의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를 인정하고 난 뒤 일본의 매스컴은 북한관련 보도

2) 船橋洋一, “戰略的決斷: ‘6者’ 日本はもっと關與を,” 『朝日新聞』, 2007년 4월 16일.

3) 『朝日新聞』, 2002년 9월 19일.

로 붓물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보도태도는 북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 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에 집중되었다. 더구나 10월 15일 납치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한 후의 언론, 특히 상업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민간 TV보도는 최대한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보도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야마무로 히데오(山室英男)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5명에 관한 정보는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써 먹었다. 모조리 보도해 버렸다는 것이 되어, 그 때문에 “온천에 가주세요”라거나 무엇을 해 주세요라는 등과 같은 일을 해서 뉴스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다 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때에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공격, 김정일에 대한 공격으로 옮겨간다. 대체로 이러한 변화, 흐름이 아닌가. 바꾸어 말하면 5명에 대한 보도도 전부 반복한, 혹은 김정일 타도라고 하는 노선 위에서 방송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된다⁴⁾.

이와 같은 일본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 일본국민의 관심은 납치문제에 집중되었으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 다른 이슈에 비해 이 이슈는 전혀 그 관심도가 변화하지 않았다. 이 점은 일본의 내각부가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만든 다음 쪽의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의 내각부는 매년 ‘외교

4) 山室英男, “テレビ報道について思う,” 日朝國交促進國民協會 編, 『どうなる日朝國交交渉』(東京: 日朝國交促進協會, 2003), p. 44.

에 관한 여론조사'를 행하고 있는데, 2001년에 성청개편에 의해 내각부가 탄생했으므로, 그 이전에는 내각부의 전신에 해당하는 총리부가 같은 조사를 행했다. 가장 기본적인 설문은 각국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묻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한국에 대한 설문이 등장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북한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00년의 조사에서 부터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설문방식과는 달리 북한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설문과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설문이 제시된다. 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 중 상위 5개를 중심으로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의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

관심순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	일본인납치 68.6	일본인납치 83.4	일본인납치 90.1	일본인납치 88.3	일본인납치 87.6	일본인납치 86.7
2	미사일문제 52.1	괴선패문제 59.5	핵개발문제 66.3	핵개발문제 56.6	핵개발문제 63.9	핵개발문제 79.5
3	식량지원 50.5	핵개발문제 49.2	미사일문제 61.1	미사일문제 56.2	미사일문제 52.2	미사일문제 71.5
4	남북문제 47.9	미사일문제 43.7	괴선패문제 58.7	식량지원 47.1	정치체제 46.3	밀수, 마약 등 46.0
5	핵개발문제 39.3	식량지원 37.6	정치체제 48.7	괴선패문제 43.1	식량지원 41.2	정치체제 44.5

*복수응답 가능, 단위는 %.

*2001년도에는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가 행해지지 않았음.

*조사시기는 매년 10월 중순경.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검색일 : 2007년 6월 23일)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일본국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일본인납치 문제이다. 특이한 것은 가장 충격이 컸을 것이라 생각되는 2002년 당시의 83.4%보다 2003년의 조사에서 오히려 90.1%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또한 2006년도의 조사시점이 10월5일에서 15일 사이이므로, 10월 9일에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큰 충격이 이 설문조사에 반영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79.5%로 관심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납치문제에 대한 관심도에는 못 미쳤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일본국민의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관심도 속에서 매스컴은 대중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된다. 현재의 수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바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영웅이 된 인물이다. 고이즈미의 평양방문 시에 일본인납치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죄가 없으면 공동선언에 조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사실과, 5명의 납치피해자가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결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아베 수상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이와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결국 전후 수상 중에서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를 제치고 최연소 수상이 되었던 것이다. 아베 수상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은 납치문제에 있어서의 대북 강경책에 의한 국민적 인기이며, 따라서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좀처럼 하기 힘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결과, 현재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정책이 왜 폐쇄회로 속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지가 분명해졌다. 매스컴의 선

정적인 보도에 의해 납치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계속 지속되고, 그와 같은 대중적 관심 속에 탄생한 스타 정치인은 대북 강경책을 외치게 되며, 매스컴은 그와 같은 대북 강경책을 외치는 정치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고 하는 순환구조 속에서 납치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책은 논의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납치문제는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측은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화교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일본측의 요구에 응해, 국제적인 오명을 뒤집어쓸 각오를 하고 납치 사실을 ‘고백’ 했던 것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 북일국교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의 기대와는 반대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서,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 납치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는 북한측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일본측에 전달한 8명의 납치피해자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인데, 분명히 부자연스러운 이들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다시 한 번 북한에게 새로운 ‘고백’을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최초의 ‘고백’에 의해 당초 상정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새로운 ‘고백’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납치문제에 의해 결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2.13합의에 있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에 여전히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 2.13합의에 의해 3월 7일과 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일국교정상화 작업부회가 차기 회의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모두 납치문제에 있어서 북일이

극한적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인 일본의 자세

2002년 9월 17일 평양선언에서는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로 연장할 것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데 반해, 핵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의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정보는 고이즈미 수상이 방북하기 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의 실무자차원의 협의의 장에서 일본 측에 전달되어 있었다. 미국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발전에 사용하는 농축도인 20%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이 정보는 정상회담의 장에서도 언급되었다고 한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수상은 북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정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미국은 10월에 켈리 차관보를 북한에 파견했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시발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북핵문제의 발생 당시부터, 북핵으로부터 가장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즉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이 주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오직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5) 『朝日新聞』, 2002년 10월 18일.

대응을 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하지 않았으며, 일본 역시 핵문제의 해결은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역시 일본이 납치문제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방안을 내어놓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하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선시한 일본이 2004년에 성립시킨 것이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이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우리나라 혹은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외환법의 목적으로 새롭게 추가하여(제1조), 일본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송금의 정지나 수출입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10조). 즉 일본정부가 북한이 일본 혹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북한에 대한 송금의 정지, 수출입의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특정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특정한 외국의 항구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특정선박’은 북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정하고 준비한 위와 같은 법률적 조치들이 최초로 발동된 것은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일본정부는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

법'을 처음으로 발동하여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1) 만경봉호의 6개월간 입항금지
- (2) 북한당국 직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도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한다.
- (3) 주일 북한당국 직원이 북한으로 갔다가 재입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4) 일본의 국가공무원이 북한으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며, 일본국민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에 대한 자속을 요청한다.
- (5)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전세기편 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9월 19일에는 7월 16일에 행해진 UN의 대북제재결의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15개 기업과 한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송금정지, 자산동결을 행하는 금융제재조치를 발동했으며,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

- (1) 모든 북한선적 배의 입항을 금지한다.
- (2)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
- (3)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의 입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주일 북한당국의 직원 이외의 사람의 재입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의 경우에도, 핵실험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일본이었다. 아소 타로는 현직 외상으로서 『中央公論』 2006년 9월호에 미사일발사 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 사태는 미일이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가장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이니까, 일본의 대응은 마땅히 가장 준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으며, '제재'의 가능성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결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노선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아침 총리관저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논의의 여지도 없이 결정되었다고 한다⁶⁾. 그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UN의 비난결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일본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말하면서 일본이 스스로 결의안을 주도하여 성립시킨 것은 전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와 같이 일본외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외상의 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느껴지기 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했다는 자부심만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 외의 일본의 대응에 있어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9.19공동성명에 의거하여 2006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북경에서 제13차 북일국교정상화 협상이 있었다. ①납치, ②핵·미사일 등 안전보장문제, ③ '과거의 청산'을 포함한 국교정상화, 라는 세 가지 이슈를 동시에 다루었지만, 역시 논의가 집중된 것은 납치문제였으며, 일본측이 납치문제의 진상규명과 납치실행범 3명의 인도를 요구한 데에 반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

6) 麻生太郎, “日本外交 試練と達成の十一日間,” 『中央公論』, 2006년 9월, p. 136.

7) 위의 글, p. 143.

며, 오히려 탈북자를 지원한 시민단체관계자들 7명의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또한 2.13합의 이후 합의내용에 따라 2007년 3월 7일과 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일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일본이 납치피해자, 가족의 조기귀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에 반해 북한은 일본이 발동한 경제제재의 해제, 조총련에 대한 탄압 중지,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의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결국 1년 전의 상황을 되풀이해서 연출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본이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크게 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북핵·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그와는 대조적으로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그 동안 국내여론의 반대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안전보장정책의 변화, 안보관련 법률의 정비를 해왔다는 점은 북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일본의 보수정치인과 보수언론이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사용하는 논리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그 유일한 공격대상은 일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베 수상은 2004년『正論』4월호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 세계에서 가장 곤경에 빠지는 것은 일본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일본을 표적으로 한 노동미사일을 100기 이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햇볕정책’을 내걸고 있으며, 동포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까지 도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동맹국이며, 러시아도 구소련시대부터 그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폭탄과 그 운반수단을 금후라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은 일본으로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결의를 가지고 금후의 북일교섭, 6자회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⁸⁾.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직후인 2006년 10월 11일자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국이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중국, 한국, 러시아와 일본은 위협인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⁹⁾고 말하여 기본적으로 2년 전 아베 수상이 북핵에 대해 가진 인식과 완전히 같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인데,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의 유일한 목표는 일본이라는 이와 같은 논리는 납치문제 등에 의해

8) 安倍晋三·中西輝政, “この國難を超えて保守復権をめざせ,” PHP研究所 編, 『安倍晋三對論集: 日本を語る』(東京: PHP研究所, 2006), pp. 142-143.

9) 『讀賣新聞』, 2006년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결국 북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보정책, 법률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오랫동안 여론의 반발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던 안보정책의 변화, 법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사법제의 정비이다. 전후 오랫동안 유사법제에 대한 논의는 정치인들 사이에 터부가 되어 있을 정도였다.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던 전후 일본에 있어서 전쟁상황을 상정한 법률을 정비하지는 논의를 하는 정치인은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유사법제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 왔으나, 이를 정치일정에 올리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1년 9.11테러에 의해 변화한 안보 정세를 배경으로 고이즈미 수상은 2002년 유사관련 3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통과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9월의 고이즈미 평양방문에 의해 납치문제가 드러나고, 10월의 켈리 차관보의 방북에 의해 북핵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야당 역시 법안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2003년 유사관련 3법안, 2004년 유사관련 7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본은 유사법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2004년 성립된 신방위대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의 핵을 이루는 것이 MD시스템인데,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MD시스템의 공동개발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MD시스템 개발을 합리화 시키는 가장 좋은 재료이다. 즉 기존의 핵역지력의 개념은 상대방이 합리적 행동을

할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행위자일 경우에는 역지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MD시스템 개발의 논리인데, 북한이야말로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비합리적인 행위자' 인 것이다.

셋째, 현재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고 하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혁명적인 변화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꾀하며 아베 수상은 대부분의 위원이 집단적 자위권행사 찬성론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발족시켰는데, 7월 10일 이 간담회의 좌장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아베 수상이 제기한 케이스에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보고서를 올해 가을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냉전종결 후,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군비확장과 같은 상황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헌법해석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① 공해상에서의 미군의 방호, ②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대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이 대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두 케이스는 아베 수상이 제기한 것으로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한 것이다.

II. 부분 성공의 조건과 이후의 대응방안

북핵 불능화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부분 성공이라고 할 경우,

일본의 대응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북한이 2.13합의의 내용을 이행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13합의에 서명한 일본 역시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다. 그렇다면 2.13합의에는 일본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째, 북일국교정상화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무그룹회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미 첫 번째 협의회가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둘째, 북한이 2.13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긴급히 제공되는 5만 톤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부담을 분담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있다.

이 2.13합의의 1조에서는 9.19공동성명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 대 ‘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일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처하게 될 어려운 입장에 대하여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는 2.13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기고한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⁰⁾. 즉 그는 일본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국내여론을 중시하여 제재를 포함한 현재의 대북강경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경우 6자회담의 합의이행을 포함한 국제협조체제에서 고립된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협조노선을 우선시하여 이번 합의

10) 『朝日新聞』, 2007. 2. 14.

에 따라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 이 선택지는 납치문제를 중시하는 국내여론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당분간은 국내여론 중시의 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에너지 제공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의 사태는 오코노기의 예측대로 전개되었다. 즉 아소 외상은 3월 3일 후쿠오카시에서의 강연에서, 7일부터 시작되는 하노이에서의 실무그룹 회의에서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며,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를 해제할 생각도 없다. 분명히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4월 10일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면서, 아베 수상 역시 “핵, 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¹¹⁾고 기자단에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은 작년의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을 변화시킨 미국과의 사이에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12일자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4월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행해진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수상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테러지원국가 지정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으나, 동석하고 있던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정이나 해제의 근거가 되는 국내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라 설명한 후 “미국국민이 직접(납치)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다.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이다¹²⁾.

11) 『朝日新聞』, 2007. 4. 11.

12) 『朝日新聞』, 2007. 5. 12.

또한 6월 25일 힐 차관보는 핵불능화 단계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협약도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직접적인 당사자의 정의(定義)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26일 시오자키(塩崎)관방장관은 “4개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이론을 제기했으며, 27일에는 아베 수상이 “일본을 제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북한)은 여러 전술을 도모하여 일본이 고립되도록 연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책모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일간의 불협화음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일본외교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납치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국내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국내정치의 여러 이슈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 의해 발족 직후 63%의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던 아베내각의 인기는 28%까지 떨어졌다. 7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선거에서 비록 아베 수상이 퇴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민당이 참패할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지만, 아베 수상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정치문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은 아베 수상이 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납치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 타협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볼 때, 2.13합의가 있는 뒤에 행해진 한 잡지사의 인터뷰에 있어서 납치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납치문제에 관한 한, 그의 ‘주장하는 외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총리에 취임하여 거의 반년정도 되어갑니다만 지금까지 행한 양국간의 정상회담은 13번 정도이고, 만난 정상도 39명(3월 22일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 납치문제에 관해서 말하면, 모든 정상회담에 있어서 설명했습니다. 설사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말입니다. 국제적인 인식을 높여, 일본에 대한 지지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¹³⁾.

게다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이미 매우 구조화 되어 있어 유연하게 정책을 변경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2006년 6월 16일 소위 북한인권법으로 불리는 ‘납치문제 그 외의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있으며, 9월 29일에는 각 의결정에 의해 일본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설립되었다. 납치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강경한 대응은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쉽사리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비록 북미수교까지를 시야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변화에 대해 일본이 당혹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베정권이 납치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安倍晋三·櫻井よしこ, “激突インタビュー：安倍晋三vs櫻井よしこ,” 『文藝春秋』, 2007년 5월호, p. 104.

Ⅲ. 완전성공의 조건과 이후의 대응방안

완전성공의 조건은 북한의 핵폐기이며, 이는 북한이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9.19공동성명의 당사자인 일본 역시 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북일관계가 2002년의 북일 평양선언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평양선언의 의미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의 완전성공 이후 일본의 대응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재음미해야 할 평양선언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인납치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인정과 사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날조라고 주장해왔던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체제가 그만큼 한 개인의 의지에 의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북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 있어서도 의외로 쉽게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협력은 반드시 국교정상화 이후에 실시한다고 못 박은 것은 일본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며, 북일국교정상화라는 게임에 있

어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이 게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이 문구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 평양선언에 의해 행해진 첫 번째 북일교섭이 2002년 10월 29일과 30일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는데, 핵심주제는 납치문제와 핵문제였다. 따라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북한이 이행함으로써 북일간에 개최될 수 있는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서는 의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서는 오직 납치문제만이 남게 된다. 게다가 이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이 개최되는 국제환경은 2002년 당시와는 180도 다른 것이 될 것이다. 2002년 당시는 켈리 차관보의 방북시에 북한이 핵개발사실을 인정했다는 미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였으며, 따라서 설사 일본에 북일국교정상화의 의지가 강력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의 균열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북일국교정상화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만일 9.19공동성명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미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되고, 북미수교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계속해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2002년 당시와는 반대로 그와 같은 행위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이며, 일본외교의 기본축인 미일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핵폐기에 의해 북한을 둘러

싸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주변 각국의 각축이 치열해 질 것이며, 일본의 재계가 그와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납치문제를 어떤 선에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2002년 당시와는 달리 미국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북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재자가 되어 북한에 대해 일본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선까지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 역시 국교정상화교섭을 진행시킬 것을 요청한다면, 납치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특히 북한의 경우는 최고지도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이 경제협력자금 지원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본의 여론이며, 만일 여전히 여론이 납치문제에 있어서 강경하다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국내정치가 양분되어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북일이 각각 북일국교정상화에 의해 상호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실제로 그것이 2002년의 평양회담을 성립시킨 동인이기도 했다. 즉 북한은 북일국교정상화에 의해 얻어질 경제협력자금을 이용하여 자생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일본 역시 북일국교정상화에 의해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제1차 고이즈미 방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국교정상화는 북한에만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이번 경제원조 등은 북한에게 있어서 핵개발의 대가로서는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핵을 포기시키는 대가로서는 비싼 것이 아니다. 특히 경제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전전에는 한반도 북부에 상당히 투자를 했었다. 금후에 북한이 시장으로서 개방된다면, 일본이 얻는 이익도 상당히 클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마약을 비롯한 범죄문제도 줄어들 것이다¹⁴⁾.

결국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북미수교교섭이 급진전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 역시 납치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고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IV. 실패의 조건과 이후의 대응방안

핵 불능화 조치조차도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2.13합의를 북한이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여 안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MD시스템

14) 田中均, “六者合意は北朝鮮への最後通牒になる,” 『中央公論』, 2007년 4월호, p. 129.

을 완성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핵에 관해서 말한다면 일본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으며, 그와 같은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므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펴야 하는 필연성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전수방위원칙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적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자위대가 그와 같은 선제공격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만일 북핵문제의 해결에 실패한다면,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술하는 핵무장에 의한 억지력 보유와는 다른 방향의 길인데, 송화섭은 일본이 굳이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20세기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손에 쥐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정확성과 타격력이 보다 고도화된 최첨단 무기의 개발 및 획득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¹⁵⁾.

셋째, 일본도 핵보유국이 되는 것에 의해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아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 논객들이 최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 길이다. 북한의 미사일실험이 있는 직후 일본의 우파논객들이 총집결하여 집필한 『日本核武裝の論点』이라는 책 속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할 경우, 일본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15) 송화섭, “보통국가로 돌아간 2025년의 일본,” 한국국방연구원 편, 『2025년 미래대 예측』(서울: 김&장, 2005), pp. 149-150.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이다.

우선 나카니시 테루마사(中西輝政)의 주장으로 북한의 대포동 2호의 개발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은 이전과 같은 확실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대포동 2호가 미국본토까지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유사시에 미국이 자국민을 희생하면서까지 일본을 방어해주겠다는 가라는 문제제기인 것이다¹⁶⁾.

다음으로 이토 칸(伊藤貫)의 주장으로서, 현재 개발 중인 MD시스템은 수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의해 동시에 공격받았을 경우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핵무장에 의해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의 방법이라는 것이다¹⁷⁾.

현재 정치인 중에는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10월 15일 한 TV프로에 나와 “헌법에도 핵보유는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아베 수상에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며, 자민당 정조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나카가와 의 이 발언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졌으며, 16일 나카가와 스스로 자신은 핵무장반대론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나카가와 는 그 후에도 스스로의 주장을 여러 기회를 통하여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극우파에 해당하는 산케이(産経)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인『正論』2007년 5월호에 실린 대담기 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6) 中西輝政 編著, 『日本核武装の論點』(東京: PHP研究所, 2006), pp.14-58.

17) 위의 책, pp. 190-251.

핵보유는 어렵다는 재료를 찾으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기보다도 일본인의 의지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옳은가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토씨(대담의 상대자:필자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립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자주방위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¹⁸⁾.

이 나카가와와의 입장에 대해 동조하는 또 한명의 유력정치인은 외사인 아소 타로(麻生太郎)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날,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을 모든 수단으로 지키겠다고 표명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무장론이 대두할 위험이 있다”고 라이스 방일에 앞서 사전포석을 했던 아소 타로 외상 자신이 아이러니컬하게도 10월 18일의 국회답변에서 “이웃나라가(핵을)가지게 되었을 때, (일본이 핵보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논의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여 본심을 드러냈던 것이다¹⁹⁾.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국민의 78%가 일본의 핵보유에 반대하고 있으며²⁰⁾,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핵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

18) 中川昭一·伊藤貫, “名譽ある獨立のための當然の國防論議.” 『正論』, 2007년 5월호, p. 56.

19) 『朝日新聞』, 2007년 3월 8일.

20) 마이니치신문에 의해 2006년 11월 25, 26일에 행해진 여론조사에 따름. 『毎日新聞』, 2006. 11. 27.

서조차도 현 정권의 유력정치인인 나카가와와 아소가 핵보유에 대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본다면, 만일 이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본의 핵보유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2004년 말 현재 약 150톤으로 세계5위안에 든다고 한다²¹⁾. 게다가 일본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H2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정부에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상당히 단기간에 핵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선택은 단순히 안보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일동맹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대국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국가진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간단히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의 여론과 국내정치세력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분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변신을 해왔던 과거 일본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일본이 그와 같은 길을 택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V. 한반도 평화에의 합의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를 한반도의 평화와 결부지어 생각해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과 일본이 국교

21) 鈴木眞奈美, 『核大國化する日本：平和利用と核武裝論』(東京：平凡社, 2006), p. 219.

정상화 교섭에 들어가, 그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고, 북일 수교가 이루어져서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을 의해 북한이 자생적인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역으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핵문제해결이 실패로 돌아가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일본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치닫는 경우일 것이다. 누구도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미 영변의 핵시설 가동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 역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북핵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에 의한 체제유지 시도라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자생적인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에 의해서만이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만일 자생적 경제체제를 갖추는 데에 북한이 실패하게 된다면, 핵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일국교정상화에 의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의해 북한의 경제가 희생하는 것이 실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닿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화섭, "보통국가로 돌아간 2025년의 일본," 한국국방연구원 편, 『2025년 미래대예측』(서울: 김&장, 2005).
- 中川昭一·伊藤貫, "名譽ある獨立のための當然の國防論議," 『正論』, 2007년 5월호.
- 中西輝政 編著, 『'日本核武裝'の論点』(東京: PHP研究所, 2006).
- 田中均, "六者合意は北朝鮮への最後通牒になる," 『中央公論』, 2007년 4월호.
- 防衛廳 編, 『平成18年版日本の防衛: 防衛白書』(東京: ぎょうせい, 2006).
- 防衛廳防衛研究所 編, 『東アジア戰略概觀』(東京: 國立印刷局, 2004).
- 鈴木眞奈美, 『核大國化する日本: 平和利用と核武裝論』(東京: 平凡社, 2006).
- 重村智計, 『朝鮮半島「核」外交: 北朝鮮の戰術と經濟力』(東京: 講談社, 2006).
- 安倍晋三, 『美しい國へ』(東京: 文藝春秋社, 2006).
- 安倍晋三·櫻井よしこ, "激突インタビュー: 安倍晋三vs櫻井よしこ," 『文藝春秋』, 2007년 5월호.
- 安倍晋三·中西輝政, "この國難を超えて保守復權をめざせ," PHP研究所 編, 『安倍晋三對論集: 日本を語る』(東京: PHP研究所, 2006), pp.142-143.
- 麻生太郎, "日本外交, 試練と達成の十一日間," 『中央公論』, 2006년 9월.
- 山室英男, "テレビ報道について思う," 日朝國交促進國民協會 編, 『どうなる日朝國交交渉』(東京: 日朝國交促進協會, 2003).
- 山崎拓, "米朝妥協, 日本はバスに乗り遅れる," 『中央公論』, 2007년 3월호.
- 船橋洋一, "戰略的決斷: '6者' 日本はもっと關を," 『朝日新聞』, 2007년 4월 16일.
- 『朝日新聞』
- 『讀賣新聞』
- 『毎日新聞』
- <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검색일: 2007년 6월 23일)